

01. ①	02. ②	03. ②	04. ③	05. ③	06. ④	07. ③	08. ②	09. ①	10. ④
11. ④	12. ①	13. ⑤	14. ②	15. ①	16. ⑤	17. ④	18. ⑤	19. ③	20. ③

1.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

정답 해설 :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.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수준의 정치 현상만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정치로 본다. 정답 ①

[오답피하기]

-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 협상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.
-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수준의 정치 현상만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.
-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본다. 따라서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강조한다.
-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한 사회 집단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.

2.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

정답 해설 :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형식적 법치주의,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.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(가)는 적정성의 원칙이다. ②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헌법 재판 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. 정답 ②

[오답피하기]

- 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그 법적 제재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. 실질적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는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도 강조한다.
-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.
- ④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이 강조되면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실현된다.
- ⑤ (가)는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적정성의 원칙이다. 죄형 법정주의를 위해 유추 해석은 금지된다.

3.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

정답 해설 :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는 복지 국가의 원리, B는 문화 국가의

원리이다. ② 문화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으로 평생 교육 진흥, 전통문화의 진흥 등을 들 수 있다. 정답 ②

[오답피하기]

- ① ‘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.’는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.
- ③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.
-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강조된다.
- ⑤ 복지 국가의 원리는 여성 및 연소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한다.

4.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

정답 해설 : 갑국은 의원 내각제, 을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.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. 정답 ③

[오답피하기]

- ① (가)에는 대통령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들어가야 하므로 탄핵 소추권, 각종 동의권과 승인권이 들어갈 수 있다.
- ② (나)에는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들어가야 하므로 의회 해산권이 들어갈 수 있다.
- ④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.
- 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의회 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.

5. 정치 참여 방법 이해

정답 해설 : ③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치 참여는 시·공간의 제약을 완화시켜 국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. 정답 ③

[오답피하기]

- ① 청원이 활성화될수록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은 강화된다.
- ② 국민의 개선 요구는 정치 과정 중 투입, 환류에 해당한다.
- ④ 공개 청원 제도는 국민의 의견 제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.
- ⑤ 온라인 제출과 공개 청원 제도는 모두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.

6. 기본권에 대한 이해

정답 해설 : (가)는 자유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, (나)는 평등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. (다)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. ④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헌법 조항의 목적은 헌법에 제시된 목적, 방법, 한계에 부합하지 않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. 정답 ④

[오답피하기]

- ①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.
- ②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.
- ③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,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.
- ⑤기본권 제한의 요건 중 방법적 요건인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목적의 정당성, 수단의 적합성, 피해의 최소성,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.

7.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이해

정답 해설 :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국회, B는 대법원, C는 헌법 재판소이다. ③ 헌법 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제소가 있을 때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한다. **정답 ③**

[오답피하기]

- ①국무 회의의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.
- ②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- ④헌법 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전제되어야 한다.
- ⑤대법원장(長), 헌법 재판소장(長)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다.

8.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이해

정답 해설 :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이익 집단, B는 정당, C는 시민 단체이다. ② 정당은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. **정답 ②**

[오답피하기]

- ①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.
- ③시민 단체, 이익 집단, 정당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.
- ④이익 집단은 시민 단체와 달리 집단의 특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한다.
- ⑤정당은 이익 집단, 시민 단체와 달리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.

9.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

정답 해설 :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(가)는 자유주의적 관점, (나)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. A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총회, B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. ① 총회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표결하는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. **정답 ①**

[오답피하기]

- ②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은 절차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관한 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

가진다.

- ④ 자유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 모두 국제 사회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다고 본다.
- ⑤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.

10. 근로자의 권리 이해

정답 해설 : 갑과 을은 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취직 인허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15세 이상인 자임을 알 수 있다. 갑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18세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, 을은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. ④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 을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,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하며,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,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**정답 ④**

[오답피하기]

- ①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맺어야 하며,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.
- ② 연소 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. 을의 휴일은 매주 월요일, 화요일이다.
- ③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저 임금 미만을 받도록 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. 갑은 법정 최저 임금을 병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연소 근로자 을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병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11.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 이해

정답 해설 : A는 지방 자치 단체장, B는 지방 의회이다. ④ 지방 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. **정답 ④**

[오답피하기]

- ① 주민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갖는다.
- ②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·확정권은 지방 의회가 갖는다.
- ③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집행 기관으로서 중앙 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도 담당한다.
- ⑤ 조례 제정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.

12. 헌법 개정 및 법률 제·개정 절차 이해

정답 해설 : ㄱ.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ㄴ. 국민 투표에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. **정답 ①**

[오답피하기]

ㄷ. 정부의 법률안 제출 시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.

르. 교섭 단체는 국회 의사 진행에 필요한 중요 안건 등을 협의하지만 법률 제·개정 절차의 공식적인 주체가 아니다. 국회 의장은 본회의에 제출된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.

13. 가족 관계와 관련한 법 이해

정답 해설 : 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므로 B는 양부모인 정의 성(姓)과 본(本)을 따른다. **정답 ⑤**

[오답피하기]

- ①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.
- ② 입양 후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.
- ③ A가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권자는 갑, 을, 병이다.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다.
- ④ B가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권자는 을과 정이다. B가 친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친생부모인 갑은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.

14.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

정답 해설 : 범죄의 성립 요건 중 A는 위법성, B는 책임이다. ② 위법성이 있다는 것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. **정답 ②**

[오답피하기]

- ①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.
- ③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것이다.
-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.
- ⑤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방위에 해당한다.

15.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

정답 해설 : ㄱ. 사기로 인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나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계약이다. ㄴ. 갑이 병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속임수로 계약을 하였다면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 **정답 ①**

[오답피하기]

- ㄷ.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 및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, <상황 3>에서는 병이 추인을 했으므로 을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.
- ㄹ. <상황 4>에서 을은 법정 대리인인 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.

16. 근대 민법의 수정·보완 원칙 이해

정답 해설 : 근대 민법의 수정·보완 원칙 중 (가)는 소유권 공공 복리의 원칙이다. ⑤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. **정답 ⑤**

[오답피하기]

- 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.
- ②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.
-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.
-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.

17. 손해 배상 책임 이해

정답 해설 : ④ 사용자인 을이 갑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을은 면책된다. 그러나 이 경우에 피용자인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. **정답 ④**

[오답피하기]

- ① 갑이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.
- ② 갑은 정에 대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.
- ③ 을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.
- ⑤ 재산적 손해, 정신적 손해 모두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.

18. 형사 절차 이해

정답 해설 : ⑤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갑, 을 모두 형사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. **정답 ⑤**

[오답피하기]

- ①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무죄 취지가 아니므로 갑은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없다.
- ② 을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검사가 징역 6월의 형벌이 가볍다고 판단하면 항소할 수 있다.
- ③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될 수 있는 제도는 가석방 제도이다.
- ④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. 피해자인 병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.

19. 국제법의 법원(法源) 이해

정답 해설 :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첫 번째 답안 내용은 틀렸다. 따라서 두 번째 답안 내용이 맞고 국제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법적

확신을 얻어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은 국제 관습법이므로 A는 국제 관습법이다. ③ 조약, 국제 관습법,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. 정답 ③

[오답피하기]

- ① 조약은 국제 기구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.
- ② 국제법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헌법보다 하위의 법령에 해당한다.
- ④ 조약은 명시된 입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.
- ⑤ 조약은 체결에 참여한 행위 주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지닌다.

20. 선거 결과 분석

정답 해설 :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한 현행 및 개편안의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구분		A당	B당	C당	D당	합계
현행	의회 의석률(%)	46	40	8	6	100
	정당 득표율(%)	32	44	8	16	100
	비례 대표 의석수(석)	$30 \times 0.32 = 9.6$ → 10	$30 \times 0.44 = 13.2$ → 13	$30 \times 0.08 = 2.4$ → 2	$30 \times 0.16 = 4.8$ → 5	30
	지역구 의석수(석)	36	27	6	1	70
	의회 의석수(석)	46	40	8	6	100
개편안	정당 득표율(%)	32	44	8	16	100
	비례 대표 의석수(석)	$80 \times 0.32 = 25.6$ → 26	$80 \times 0.44 = 35.2$ → 35	$80 \times 0.08 = 6.4$ → 6	$80 \times 0.16 = 12.8$ → 13	80
	지역구 의석수(석)	36	27	6	1	70
	의회 의석수(석)	62	62	12	14	150

③ 개편안 적용 시 A당과 B당의 의회 의석수는 모두 62석이다. 정답 ③

[오답피하기]

- ① 지역구 선거에서 A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36석이므로 지역구 총의석수인 70석의 과반수이다.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할 수 있으므로 갑국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다.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선거구제는 중·대선거구제이다.
- ② D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5석, C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2석이다.
- ④ 개편안 적용 시 C당의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은 모두 8%이다.
- ⑤ 최근 선거 결과에서 B당은 40석, D당은 6석을 확보하지만 두 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두 정당만으로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없다. 개편안을 적용했을 경우에 B당은 62석, D당은 14석을 확보하므로 두 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수가 된다. 따라서 두 정당만으로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.